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2회

자료 성격: 출제기준형 · 2026-10-03 · 문항 수: 80 · 근거 기준일: 2026-09-15

성명		점수	/ 100
----	--	----	-------

2026-09-16 전면 교체한 자체제작 예상문제. 작성 기준일 2026-09-15. 전체 정답·현행법령·의미중복 최종
검수와 시험 관리기관 직접 원본 대조는 미완료입니다. 정답·해설은 웹에서 확인하세요. 정답과 해설은
license.3001.co.kr의 같은 제목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공공기관이 여러 해에 걸친 친환경 설비 수요를 시장에 알릴 때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파급 경로는?

- (1) 공공 수요가 공급기업의 제품개발·투자 방향에 영향을 준다.
- (2) 예산 공지만으로 모든 기업의 낙찰이 보장된다.
- (3) 구매수요와 기업의 투자판단은 관련이 없다.
- (4) 민간시장의 제품 선택은 법적으로 모두 금지된다.

2. 한 업체가 경쟁에 참여한 뒤 선정되고, 계약까지 체결했다. 단계별 호칭의 연결로 적절한 것은?

- (1) 낙찰자 → 입찰참가자 → 감사기관
- (2) 계약상대자 → 수요기관 → 낙찰자
- (3) 입찰참가자 → 낙찰자 → 계약상대자
- (4) 수요기관 → 계약기관 → 입찰참가자

3. 절차를 생략해 우연히 싸게 구매한 사례를 조달 성과로 평가할 때 유의할 점은?

- (1) 절차가 복잡할수록 성과가 좋은 것으로 확정한다.
- (2) 가격상 이익만으로 절차의 정당성까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3) 결과 가격이 낮으면 절차상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 (4) 공공조달에서는 결과를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

4. 가상 사례에서 6개 기관이 개별 발주하면 기관당 절차비용이 40만 원이다. 공동 발주 절차비용은 총 100만 원, 기관 간 조정비용은 총 50만 원이다. 물품가격 등은 같을 때 공동 발주로 절감되는 절차 관련 비용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90만 원
- (2) 140만 원
- (3) 150만 원
- (4) 190만 원

5. 다음은 세부 예외를 제외한 공개입찰의 기본 활동이다. ㄱ. 제시된 기준에 따른 평가 ㄴ. 입찰공고와 문서 공개 ㄷ. 입찰서 제출 ㄹ. 평가결과에 따른 낙찰자 선정. 일반적인 순서는?

- (1) ㄱ → ㄴ → ㄹ → ㄷ
- (2) ㄴ → ㄷ → ㄱ → ㄹ
- (3) ㄹ → ㄴ → ㄷ → ㄱ
- (4) ㄷ → ㄴ → ㄹ → ㄱ

6. 실험장비 유지관리 용역에서 관련 기술과 경험 대신 업체 대표자의 출신학교를 참가요건으로 정하려 한다. 우선 검토할 문제는?

- (1) 그 조건으로 예상 참가업체 수가 줄어드는지 여부만
- (2) 그 요건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능력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
- (3) 과거 다른 기관에서도 같은 조건을 썼는지 여부만
- (4) 그 조건을 공고문에 미리 적기만 했는지 여부만

7. 수의계약 검토기록의 구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업체 연락처만 남기고 선택 이유는 담당자 기억에 맡긴다.
- (2) 계약금액을 기록하지 않고 신속 처리 여부만 남긴다.
- (3) 적용 사유, 대안 검토, 가격 검토, 승인 과정과 계약조건을 연결한다.
- (4) 견적서만 보관하고 계약방법 선택 자료는 폐기한다.

8. 하나의 수요로 파악된 물품 구매를 간소한 절차의 금액기준에 맞추려고 이유 없이 여러 주문으로 나누려 한다. 가장 적절한 판단은?

- (1) 주문서 장수만 늘리면 구매 목적도 서로 독립된 것으로 확정된다.
- (2) 소액주문으로 나누면 합계 지출액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 (3) 절차 적용을 피하려는 인위적 분할인지 검토해야 한다.
- (4) 같은 날 발주하지 않으면 어떤 분할도 문제가 없다.

9. 대외 포털에서 공고는 볼 수 있지만 내부에서 계약 변경 이력·예산 사용·승인 진행상태를 분석하지 못한다. 강화할 요소는?

- (1) 공급자의 상품 광고 확대
- (2) 외부 공급자의 신상품 광고 순위를 정하는 기능
- (3) 공고 게시 건수 통계만 제공하는 기능
- (4) 조달관리정보시스템과 관련 관리모듈

10. 지정 혁신제품을 전용몰에 등록하려는 기업이 준비할 기본 정보의 조합으로 적절한 것은?

- (1) 판매자가 작성한 자체 품질평가 점수만
- (2) 기관 내부 예산사업 코드와 예산 집행잔액만
- (3) 제품 홍보자료에 쓰인 통칭과 희망 판매가격만
- (4) 나라장터의 업체 등록정보와 해당 모델의 물품식별정보

11. 업체가 이음장터에 서비스를 등록했다. 이 사실만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 (1) 기관이 상품정보를 살펴볼 기회 제공
- (2) 공급 가능한 서비스 정보의 게시
- (3) 조달청과 해당 서비스에 관한 사전 구매계약 체결
- (4) 수요·공급 연결을 위한 정보의 마련

12. 신제품을 어디에 분류할지 검토하면서 품명의 설명과 분류 해설을 읽으려 한다. 어떤 검색이 더 직접적인가?

- (1) 품명검색과 분류체계 안내
- (2) 계약대금 지급계좌만 검색
- (3) 개별 공급자의 청구서 발행이력 검색
- (4) 입찰자의 개인 연락처만 검색

13. 기관의 계약과 자산관리에 이미 사용되는 품목정보를 오류라는 이유로 고치려 한다. 교재상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 (1) 상품명에 더 짧아진다는 의견만
- (2) 판매자의 광고효과 기대만
- (3) 기존 이용기관이 많으므로 근거 없이 수정하는 것
- (4) 오류 또는 누락임을 증명하는 자료

14. 개별 중소기업의 생산규모로는 큰 공공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수주를 검토한다. 적격조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설명은?

- (1) 조합원의 생산능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조합의 자격·품질관리 체계도 갖추도록 한다.
- (2) 조합이 수주하면 조합원 간 이행 분담이나 품질관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
- (3) 조합의 적격성은 조합 대표자의 개인 구매실적만으로 판단한다.
- (4) 조합 이름만 사용하면 조합원의 생산능력 확인을 생략하도록 한다.

15. 구매계획 A는 오염·자원사용 등 환경영향에 초점을 두고, 구매계획 B는 환경에 더해 노동·사회적 포용 등도 함께 고려한다. 교재의 개념 관계로 적절한 것은?

- (1) A는 사회적책임조달만을 뜻하고 B는 녹색조달만을 뜻한다.
- (2) A와 B 모두 구매가격을 고려할 수 없는 기부 방식이다.
- (3) 녹색조달은 지속가능성과 별개의 반대 개념이다.
- (4) A는 녹색조달의 초점에 가깝고, B는 더 넓은 지속가능조달의 관점에 가깝다.

16. 가상 실증지원 사업은 설치·시험에 든 비용을 지원하며 제품 구매대금은 별도 구매계약에서 처리한다. 기업이 설치·시험비와 제품 판매대금을 합친 한 장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토 방향은?

실제 보조금 지원 비율·한도는 묻지 않고 지문에 제시한 지원범위만 적용합니다.

- (1) 제품이 설치되었으므로 판매대금 전액을 실증비로 처리한다.
- (2) 시험비 지원이 있으면 이후 제품 구매계약은 불필요하다.
- (3) 같은 기업의 청구이므로 지원사업 예산에서 임의로 합산 지급한다.
- (4) 실증지원 대상 비용과 제품 구매대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지원·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17. 업체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M 외에 다른 구조의 제품 N도 판매한다. 담당자가 “같은 업체 제품으로 N도 우수조달물품”이라고 기록했다. 먼저 확인할 것은?

- (1) 업체가 우수조달물품 하나를 보유하면 전체 판매품목에 지정을 적용한다.
- (2) N의 가격이 M보다 높으면 지정 범위에 포함한다.
- (3) N이 실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대상·규격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4) M의 지정번호를 N의 납품서에 적으면 지정제품으로 바뀐다.

18. 일반기업이 장애인단체에 기부한 내역을 제시하며 장애인기업 구매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다. 장애인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판단은?

- (1) 기부실적과 장애인기업의 소유·경영 등 자격확인 은 별개이므로 관련 확인자료를 검토한다.
- (2) 기부금액이 구매대금보다 크면 장애인기업으로 본다.
- (3) 장애인단체와 거래한 모든 기업은 장애인기업이다.
- (4) 장애인 이용자가 사용하는 제품이면 공급기업도 장애인기업이다.

19. 제시된 가상 기준에서 법정 우선구매 실적은 인증 사회적기업 제품만 인정하고, 별도 기관평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제품도 인정한다.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액의 보고 방법은?

구체적인 현행 평가제도의 범위는 단정하지 않으며 지문에 제시된 두 규칙을 적용합니다.

- (1) 기관평가에서 인정하므로 법정 실적에도 자동 포함한다.
- (2)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구매기관이 소급하여 확정한다.
- (3) 법정 실적과 기관평가 실적을 구분하여 해당 기준이 인정하는 보고에만 반영한다.
- (4) 법정 실적에서 제외되므로 기관평가에서도 제외한다.

20. 상행위나 별도 보수 약정이 없는 민법상 위임이다. 수임인은 “보수를 받지 않으므로 사무를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설명은?

보수청구가 인정될 별도 상법 규정·관습·묵시적 약정 등은 없는 일반 민법상 위임입니다.

- (1) 보수청구의 근거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구별되므로 무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 (2) 무보수 위임이면 수임인은 사무처리 의무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 (3) 위임사무를 맡으면 특별한 약정 없이도 원하는 보수를 정해 청구한다.
- (4) 보수 약정이 없으면 위임계약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

21. 새로 개발된 특수 장치여서 적절한 실제 거래가격을 찾기 어렵지만 재료·노무·경비 자료는 확인할 수 있다. 예정가격 결정의 자료 선택으로 적절한 것은?

- (1) 공급자의 최초 견적이 곧 예정가격이므로 구성 비용은 검토하지 않는다.
- (2) 계약방법을 고를 때 사용한 추정가격에 세금만 더하면 모든 경우 예정가격이 확정된다.
- (3) 시장 거래가격이 없으면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 (4) 원가계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되는 비용 자료로 산정 근거를 구성한다.

22. “일반경쟁으로 업체를 정하고 납품 단가를 계약한다”는 계획서에 대해 “일반경쟁과 단가계약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바른 설명은?

- (1) 단가계약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정해야 한다.
- (2) 일반경쟁은 상대자 선정방식, 단가계약은 대가 산정단위에 관한 분류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3) 단가계약은 계약기간에 관한 분류이므로 장기계속계약과만 짝을 이룬다.
- (4) 일반경쟁을 택하면 최종 납품수량까지 반드시 총액으로 고정해야 한다.

23. 법령과 계약에 따라 물품 검사에 필요한 시험을 했고, 시험 과정에서 시료 일부가 파손됐다. 별도 특약이나 기관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전제에서 교재에 제시된 비용부담 원칙은?

국가계약법상 적법한 검사에 필요한 시험이며 책임 예외 사정이 없는 사례이다.

- (1) 검사 담당자가 시료를 직접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개인이 배상한다.
- (2) 시험 비용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시험 자체를 모두 생략해야 한다.
- (3) 검사에 필요한 시험 비용과 시험으로 생긴 변형·파손 등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 (4) 시료가 파손되면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기관이 물품대금 전액을 다시 지급한다.

24. 공급자는 정상 납품했고 조달청이 대지급을 마쳤다. 이후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상환할 금액의 납부를 지연했다. 주된 검토 대상은?

- (1) 조달청이 이미 지급했으므로 수요기관의 상환 의무도 사라진다.
- (2) 공급자의 입찰보증금 몰수이다.
- (3) 공급자의 납품 지체상금이다.
- (4) 수요기관의 대지급금 납부 지연에 관한 연체료 규정이다.

25. 업체가 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송신하면서 “기관이 별도 수신확인 메일을 보내야만 이 문서가 효력을 갖는다”는 조건을 임의로 붙였다. 기관이 따로 정한 예외가 없을 때 교재의 전자문서 규정에 따른 설명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한 예외가 없는 사례이다.

- (1) 송신자가 쓴 조건은 전자문서 규정보다 언제나 우선한다.
- (2) 송신자는 임의로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 (3) 견적서는 전자문서가 아니므로 시스템 송수신 규정과 무관하다.
- (4) 기관의 별도 메일이 없으면 이미 시스템에 입력된 문서도 자동으로 전송 전 상태가 된다.

26. 자체 구매 전문성을 이유로 위탁 예외를 검토한다. 검토자료로 적절한 것은?

- (1) 한 제품에 대한 예외를 모든 향후 제품으로 넓힌 포괄 선언이다.
- (2) 관련 조직·인력·업무 경험과 해당 제품 구매에 필요한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연결한 자료이다.
- (3) 다른 기관도 자체 구매했다는 출처 없는 소문이다.
- (4) 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만 적은 표이다.

27. 공기업의 입찰공고에 이의가 있는 업체가 최초 이의신청 접수처를 정하려 한다. 규칙상 절차를 확인하는 기본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2026년 개정 시행본의 기간은 별도 재대조 대상으로 남겨 숫자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

- (1) 신청인이 상대 회사를 지정하면 그 회사가 기관장 대신 이의를 결정한다.
- (2) 공기업은 법인이므로 계약에 관한 법정 이의신청 규정이 존재할 수 없다.
- (3) 공기업의 모든 계약 이의는 최초부터 조달청의 개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만 낸다.
- (4) 해당 계약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의신청 절차와 이후 분쟁조정 절차를 구분한다.

28. 두 법인은 문서로 “이 장비 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 대상으로 정했다. 한쪽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 임대계약 분쟁도 그 문서만으로 중재에 포함시키려 한다. 먼저 확인할 것은?

- (1) 중재인에게 자료를 일방적으로 보내면 상대방의 합의 범위도 자동 확대된다.
- (2) 중재합의가 정한 대상 분쟁의 범위에 해당 임대차 분쟁이 포함되는지이다.
- (3) 서면이 존재하면 문서에 적힌 계약 범위는 읽을 필요가 없다.
- (4) 당사자가 같으면 모든 과거·미래 분쟁이 자동으로 같은 중재합의에 포함된다.

29.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가 취소소송만 제기한 경우와, 별도로 처분 효력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를 비교한 것은?

- (1)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효력 정지를 단정하지 말고, 집행정지 결정의 내용·기간을 확인한다.
- (2) 법원 결정이 있어도 계약담당자는 그 내용과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 (3)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제재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과 항상 같다.
- (4) 소송 접수증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문과 같은 효력이 언제나 생긴다.

30. 위반 납품 사실을 조사한 뒤 환수액을 산정했다. 담당자는 조사대상 기간·수량·적용 산식을 업체에게 제시하지 않고 금액만 통보하려 한다. 적절한 보완은?

- (1) 환수 금액이 작으면 근거와 의견 확인은 언제나 필요 없다.
- (2) 업체가 의견을 내면 해당 의견의 진위와 관계없이 환수를 할 수 없게 된다.
- (3) 대상 거래와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 해당 절차가 정한 의견 확인을 거친다.
- (4) 위반 사실이 있으면 산정 대상과 수량은 추정으로 채워도 된다.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쇼핑몰에서 상품 검색 빈도는 높지만 구매실적은 적다. 이 자료의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 (1) 검색 1건을 구매 1건으로 바꾸어 예상 매출을 계산한다.
- (2) 검색 빈도가 높으므로 물량이 계약으로 확정되었다고 본다.
- (3) 관심 지표와 실제 구매 지표를 분리해 전환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한다.
- (4) 구매실적이 적으면 검색 정보는 분석 가치가 없다.

32. 전자입찰 마감시각에 맞추어 파일 업로드를 시작하는 관행을 개선하려 한다. 적절한 일정 설계는?

- (1) 파일 용량에 관계없이 업로드 시간을 0으로 잡는다.
- (2) 전송 버튼을 눌렀다면 접수 여부 확인을 생략한다.
- (3) 법정 마감 이후를 내부 검토 마감으로 둔다.
- (4) 자체 검토·제출 마감을 앞당기고 접수 완료 확인 시간을 확보한다.

33. 공급업체가 새로운 상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준비한다. 해당 상품의 실제 공급방법을 파악하는 출발점으로 적절한 것은?

- (1) 이전 입찰·계약 실적과 관련 공고에서 활용된 공급경로를 확인한다.
- (2) 상품 가격을 정하면 입찰·계약경로는 자동 확정된다.
- (3) 경쟁사 상호명만 확인하면 계약방법도 확정된다.
- (4) 회사에서 익숙한 방법이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34. 제안 인력은 필요한 자격을 갖췄으나 모두 같은 기간 다른 계약에 전일 투입되어 있다. 가장 직접적인 부족 요소는?

- (1) 법정 자격증의 명칭을 같은 서식으로 정리했는지 여부
- (2) 필요 시점에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의 가용성
- (3) 기존 인력의 연간 급여 총액
- (4) 회사의 설립 이후 누적 계약 건수

35. 가상 사업예산은 1억원이지만 업체의 검토 투찰가격은 8,800만원이다. 해당 범위의 예상 총원가는 9,100만원이다. 세금 등 다른 차이는 없을 때 판단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투찰가격을 정하면 이미 예상한 원가는 자동 감소한다.
- (2) 예산 1억원보다 원가가 낮으므로 900만원 이익이 확정된다.
- (3) 예산보다 원가가 낮아도 검토 투찰가격 기준으로는 300만원 부족하다.
- (4) 총원가와 투찰가격을 합친 금액이 이익이다.

36. 표준화된 고지출 품목은 공급대안이 많고 비수기에도 보관이 가능하다. 교재가 제시하는 비용 절감 검토와 가까운 것은?

- (1) 보관비 등을 고려하여 비수기 구매와 물량 조건을 비교한다.
- (2) 표준품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기술독점 계약을 선택한다.
- (3) 공급위험이 낮으므로 구매 시기와 물량은 분석하지 않는다.
- (4) 비수기 가격이 낮으면 보관비와 손실비용은 모두 0으로 본다.

37. 업체가 전자서명용 인증서를 발급받고 나라장터에 로그인했다. 그러나 해당 입찰에 필요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현재 준비상태에 대한 설명은?

- (1) 로그인이 되었으므로 모든 물품·용역 입찰의 참가등록이 완료된 것이다.
- (2) 인증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별도의 참가등록은 면제된다.
- (3) 인증수단을 확보한 단계이며, 요구되는 참가자격 등록의 신청·승인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4) 첫 입찰에서 가격을 제출하면 참가자격이 사후에 자동 등록된다.

38. 조달업체가 계약 관련 지침의 일부개정 행정예고문을 발견했다. 제목에 “개정안”이 있고 의견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자료를 입찰 준비에 활용하는 방법은?

- (1)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하되, 실제 적용에는 확정·발령 여부와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 (2) 의견이 하나라도 제출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본다.
- (3) 의견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개정안의 모든 조항을 현행 기준으로 적용한다.
- (4) 행정예고가 있으면 진행 중인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새 조건으로 바뀐다.

39. 업체가 사전규격에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설명은?

- (1) 사전규격공개는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와 동일하다.
- (2) 의견이 반영되면 실제 이행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 (3) 의견을 한 번 내면 모든 참가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4) 의견 제출과 해당 법규·확정 요구사항의 준수는 별개다.

40. 입찰공고 제목과 예정 납기만 확인한 직원이 바로 가격을 제출하려 한다. 참가 적정성 분석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제목에 자사 제품명이 있으면 제출서류는 낙찰 뒤 처음 확인한다.
- (2) 공고문과 첨부자료의 자격·규격·평가방법·제출서류·일정·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 (3) 투찰가격이 낮다면 공고에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 (4) 전년도 유사 공고를 읽었으므로 이번 첨부자료는 생략한다.

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단가계약 입찰보증금 산정기초를 적용한다. 단가 2만 원, 매회별 최대 이행예정량 300개, 연간 예상량 2,000개라면 보증비율을 곱하기 전 산정기초 금액은?

- (1) 600만 원이다.
- (2) 300만 원이다.
- (3) 4,000만 원이다.
- (4) 2만 원이다.

42. 입찰설명회가 열린다는 사실만 확인한 직원이 “설명회가 있으면 모든 입찰에서 불참자는 무조건 무효”라고 안내한다. 참가 준비에서 확인할 것은?

- (1) 설명회 참석은 어느 경우에도 참가자격과 관련될 수 없다.
- (2) 해당 공고·적용 규정이 참석을 의무화했는지와 불참의 효과이다.
- (3) 참가업체 수가 적을수록 참석의무가 자동 발생한다.
- (4) 회의 개최 여부만으로 법적 불참 효과까지 확정한다.

43. 국가계약 입찰에서 한 사람이 법인 A와 B의 대표자이고 두 법인이 동일사항에 각각 입찰서를 제출했다.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의 동일인 판단은?

- (1) 해당 조항에서는 그 여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아 중복 입찰을 판단한다.
- (2) 두 법인의 업종이 다르면 같은 입찰에 낸 두 통을 하나로 합산한다.
- (3) 두 법인의 가격이 다르면 중복 입찰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4) 법인등록번호가 다르면 해당 조항상 언제나 별개의 입찰자이다.

44. 내부 규정은 일정 규모 사업의 낙찰 결정을 상위 승인권자에게 맡긴다. 평가팀이 추천보고서를 완성한 뒤 승인 없이 확정통지를 하려 한다. 누락된 절차는?

승인권자의 내부 권한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 (1) 참가업체 전원에게 과반수 투표를 받아 승인한다.
- (2) 추천자료를 정해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는 절차이다.
- (3) 추천보고서를 만들면 직급과 관계없이 승인권한이 자동 생긴다.
- (4) 낙찰 예정업체 대표가 기관의 승인권자를 대신한다.

45. 공고는 모든 제안업체에 발표 15분과 질의응답 10분을 준다고 정했다. 평가진행자가 친숙한 업체에만 발표시간 10분을 더 주려 한다. 직접적으로 훼손되는 원칙은?

제시한 공고의 발표시간 규칙과 동일 적용을 묻습니다.

- (1) 발표시간은 평가와 무관하므로 어떤 차이도 허용된다.
- (2) 사전에 정한 동일한 설명기회와 평가조건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 (3) 친숙한 업체는 제출자료를 적게 써도 되므로 추가시간을 받을 권리가 있다.
- (4) 모든 발표를 비공식 접촉으로 보아 평가를 취소해야 한다.

46. 가상 공고는 협상적격자 간 총점이 같으면 기술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한다고 정했다. A는 기술 74·가격 16점, B는 기술 77·가격 13점이다. 공고에 따른 순위는?

두 업체 모두 협상적격자이며, 동점 규칙은 가상의 공고 조건입니다.

- (1) 총점이 같으므로 두 업체 모두 적격에서 제외된다.
- (2) 접수 순서가 빠른 자가 앞선다.
- (3) A가 앞선다.
- (4) B가 앞선다.

47. 적격심사 자료 중 경영상태·납품실적 등의 정보와 물품의 성능시험 결과를 구분하려 한다. 적절한 설명은?

- (1) 제품 성능이 좋으면 공급자의 이행능력 관련 요건도 자동 충족된다.
- (2) 전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능력 판단에, 후자는 해당 물품의 성능 적합성 확인에 직접 연결된다.
- (3) 납품실적은 제품의 치수·중량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 (4) 경영상태 점수가 높으면 제품 규격의 부적합을 허용한다.

48. 정보시스템 용역 협상 중 기관이 당초 사업과 무관한 직원 개인용 앱을 무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교재가 제시하는 협상범위에 비추어?

- (1) 협상대상자에게만 요구하면 어떤 개인적 요구도 가능하다.
- (2) 계약금액을 그대로 두면 추가 요구는 내용과 관계없이 적법하다.
- (3) 협상대상자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므로 무관한 작업 의무가 생긴다.
- (4)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를 협상의 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9. 가상 종합평가에서 기술 100점 만점의 점수를 70점으로, 가격 100점 만점의 점수를 30점으로 환산한다. A의 원점수는 기술 90·가격 80점이다. 환산 총점은?

학습용 가상 가중치이며 법정 배점비율이 아닙니다.

- (1) 85점
- (2) 87점
- (3) 170점
- (4) 83점

50. 가상 결과표에서 A의 기술전략은 40점 중 24점, 인력계획은 20점 중 18점, 가격은 40점 중 36점이다. 항목별 배점 대비 취득률이 가장 낮아 우선 원인을 살펴볼 항목은?

자료의 점수는 정확하다고 가정하며, 특정 항목 점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평가의 위법·부당함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 (1) 가격
- (2) 인력계획
- (3) 세 항목이 모두 같은 취득률이다.
- (4) 기술전략

공공계약관리

51. 납품 후 무상교육의 포함 여부에 관해 양측의 기억이 다르다. 서명된 계약서와 편입된 제안서에 교육 횟수가 명시되어 있어 당시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직접적으로 작동한 계약의 기능은?

- (1) 합의한 권리·의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증거 기능
- (2) 담당자의 직무권한을 제한 없이 확장하는 위임 기능
- (3) 상대방의 모든 영업위험을 기관으로 넘기는 위험이전 기능
- (4) 장래 자재가격의 변동을 제거하는 가격안정 기능

52. 착수회의에서 현장 실무자를 일상 연락창구로 지정했다. 이후 실무자가 대금을 늘리는 설비 추가를 요구했지만 계약 변경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적절한 대응은?

- (1) 현장 실무자는 연락창구일 수 없으므로 회의록 전체를 무효로 본다.
- (2) 연락창구는 비용 증액까지 포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 (3) 연락창구 지정과 계약 변경 권한을 구분하고 권한 있는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확인한다.
- (4) 실무 요청이면 일단 증액을 확정하고 계약서에는 사후에 반영한다.

53. 하도급계획 검토에서 업체의 해당 업무 수행 자격은 확인했으나, 계약조건이 별도로 요구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자료는 없다. 적절한 검토 결과는?

지문에서 지급보증 자료를 요구하는 계약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전제합니다.

- (1) 주계약의 낙찰이 끝났으므로 하도급 관련 서류는 모두 생략한다.
-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있으면 업무 수행 자격은 없어도 된다.
- (3) 수행 자격이 있으면 하도급대금 지급도 보증된 것으로 본다.
- (4) 수행 자격 확인과 별도로 지급보증의 적용 여부·제출 내용을 확인한다.

54. 설계변경 검토에서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시공하는지”와 “그 품목의 계약단가가 얼마인지”를 나누어 확인하려 한다.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의 일반적 구별로 적절한 것은?

- (1) 두 문서는 이름만 다르므로 수량 변경과 단가 변경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 (2)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있으면 설계도면의 규격 확인은 필요 없다.
- (3) 물량내역서는 신용평가 결과를, 산출내역서는 계약보증 기간을 표시한다.
- (4) 물량내역서는 품목·규격·수량 등 물량 정보를, 산출내역서는 이에 단가 등을 반영한 금액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

55. 계약상대자가 핵심 부품 공급 중단으로 납기 내 완성이 불가능함을 미리 확인했다. 아직 납기는 지나지 않았고 발주기관의 해지 결정도 없다. 교재가 제시한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 (1) 해지 결정이 내려진 뒤에만 이행 곤란을 통지한다.
- (2) 납기 전에는 문제를 알릴 필요가 없으므로 그대로 납품완료를 보고한다.
- (3) 통지 없이 임의로 규격을 낮춰 공급하면 당초 계약도 이행된 것으로 본다.
- (4) 납기 내 이행 곤란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알리고 원인·잔여 이행 가능성·대응안을 제시한다.

56. 계약은 공급자가 납품 준비 완료를 통지하면 기관이 검사 인력과 시험장소를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급자는 예고 없이 야간에 반입한 뒤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행관리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통지와 일정 조율이 유효한 계약조건이며 긴급반입에 대한 별도 합의는 없습니다.

- (1) 검사자는 공급자의 임의 반입 시각에 상시 대기해야 한다.
- (2) 계약상 준비 통지와 검사 일정 조율 절차가 지켜졌는지
- (3) 반입을 시도했으면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가 합격한 것으로 본다.
- (4) 물품을 현장 근처에 가져오기만 하면 검사 일정도 자동 확정된다.

57. 납기가 30일인 계약에서 업체가 자체 회복계획을 제출하며 “다음 달 5일 완료 예정”이라고 적었다. 기관은 검토 중이며 납기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 관리대장에 적절한 기록은?

- (1) 계약상 납기는 30일로 유지하고 업체의 수정 예상 완료일은 별도 전망치로 기록한다.
- (2) 기관이 회복계획을 접수했으므로 지체상금 등 모든 지연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본다.
- (3) 예상 완료일을 적으면 지연을 인정한 것이므로 전망치는 관리하지 않는다.
- (4) 업체가 제출한 최신 날짜가 계약상 납기를 자동 대체한다.

58. 교재의 납품 검사·검수 구별에 따라, ㉠ 계약 규격과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업무와 ㉡ 검사에 합격한 물품의 손상 여부와 인수 수량을 확인하는 업무를 짝지은 것은?

교재의 개념 구분을 묻습니다. 검사 대상에 품질·수량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과 양립합니다.

- (1) ㉠ 검사 — ㉡ 검수
- (2) ㉠ 검수 — ㉡ 검사
- (3) ㉠ 입찰참가자격 심사 — ㉡ 예정가격 작성
- (4) ㉠ 대금지급 — ㉡ 계약보증금 납부

59. 계약 종료 후 담당자는 빈번한 고장의 원인이 구매 당시 규격의 누락과 관련 있음을 정리했다. 다음 유사 구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종결 조치로 적절한 것은?

- (1) 계약이 끝났으므로 유사 구매에 사용할 이행기록을 모두 지운다.
- (2) 한 계약의 문제를 근거 확인 없이 모든 업체의 평가 감점으로 전환한다.
- (3) 고장이 있었다는 결과만 적고 규격·원인과의 연결은 남기지 않는다.
- (4) 확인된 누락·개선안을 근거와 함께 구매·규격 작성 부서에 전달한다.

60. 공사손해보험은 10월 말 종료될 예정인데 공사 지연으로 인수와 필요한 시운전이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재의 보험기간 관리 설명에 맞는 조치는?

- (1) 공사기간만 연장하면 보험기간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기록한다.
- (2) 보험 종료 전에 보험사에 알리고 실제 이행·시운전을 포함하도록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한다.
- (3) 보험증권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종료일은 확인하지 않는다.
- (4) 당초 공기가 끝났으므로 미완공 공사의 사고 위험도 사라진다.

61. 교재의 등록절차에서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도록 정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가 있다. 신청자가 그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다. 절차상 적절한 처리는?

- (1) 신청자의 비동의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정보를 임의 수집한다.
- (2) 비동의만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 요건 자체를 면제한다.
- (3) 해당 서류를 정해진 방식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한다.
- (4)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도 비동의 즉시 영구 등록금지로 처리한다.

62. 교재의 희망수량 경쟁에서 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보유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다른 유효성·가격조건을 충족한 입찰자들의 가격 우선 방향은?

- (1) 희망수량 방식이면 가격은 보지 않고 업체 이름순으로 정한다.
- (2) 구매와 매각 모두 기관이 지급하는 돈을 늘리도록 높은 단가부터 검토한다.
- (3) 구매는 낮은 단가부터, 매각은 높은 단가부터 필요한 범위까지 검토한다.
- (4) 구매는 높은 단가부터, 매각은 낮은 단가부터 검토한다.

63. 가상 견적 절차는 예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이면서 그 90% 이상인 가격 중 최저가격을 선택한다. 유효한 견적은 A 890만 원, B 920만 원, C 970만 원, D 1,010만 원이며 다른 제외사유는 없다. 선정 대상은?

90%와 금액은 학습용 가상 기준입니다. 실제 수의계약의 법정 하한율이나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 (1) A
- (2) D
- (3) B
- (4) C

64. 같은 납품 수량의 품목 A는 고장 시 단순 업무 불편이 생기지만, B는 결함이 이용자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품질점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절한 고려는?

- (1) 가격·수량뿐 아니라 결함의 안전 영향과 발생위험을 반영해 점검 강도를 검토한다.
- (2) 가격이 싼 품목의 안전 문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 (3) 사용자가 위험을 감수하면 계약상 안전 확인을 항상 생략한다.
- (4) 수량이 같으면 위해 정도는 품질관리와 관계없다.

65. 물품 규격서는 필수 부속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산출내역서는 완제품 가격 한 줄로 표시한다. 담당자는 부속품이 산출내역서에 별도 가격으로 적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계약범위에서 제외하려 한다. 교재의 계약문서 설명에 따른 검토는?

- (1) 규격서 요구는 가격과 무관하므로 어떤 추가 작업도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2) 완제품 가격 한 줄인 계약에서는 금액 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3) 규격서 등 계약문서를 함께 해석하고, 별도 가격줄의 부재만으로 명시된 요구를 삭제하지 않는다.
- (4) 산출내역서에 별도 줄이 없으면 규격서의 모든 요구가 무효다.

66. 건축설계 용역과 건물 청소 용역을 “건물에서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같은 업종 자격으로 검토했다. 적절한 수정은?

- (1) 인력이 수행하면 설계도 모두 단순 인력공급계약이다.
- (2) 설계의 전문 기술 업무와 청소의 시설 서비스 업무를 구분하고 각각 적용되는 자격을 확인한다.
- (3) 청소 업체가 공공기관과 거래한 적이 있으면 설계 자격도 자동 인정된다.
- (4) 장소가 같으면 업무의 법적 성격과 필요한 자격도 항상 같다.

67. 가상 비교에서 A는 입찰가격 90·수행점수 86, B는 입찰가격 95·수행점수 94이다. X방식은 수행점수 85 이상 중 저가, Y방식은 주어진 종합점수 A 88·B 92 중 고득점자를 정한다. 결과는?

가격·점수·통과기준은 제도 비교를 위한 가상값이며 실제 법정 배점표가 아니다.

- (1) X와 Y 모두 A
- (2) X는 A, Y는 B
- (3) X는 B, Y는 A
- (4) X와 Y 모두 B

68. 발표자가 제출 제안서에 없던 무상 상주인력 확대를 구두로 약속했다. 평가·협상 기록의 적절한 취급은?

- (1) 발언을 기록하고 제출조건·평가기준상 취급 및 협상 시 확정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한다.
- (2) 추가 발언이 있으면 원래 제출 제안서 전체를 자동 삭제한다.
- (3) 구두 약속은 비용이 없다고 했으므로 인력 확보 가능성은 확인하지 않는다.
- (4) 발표 중 한 말은 어떤 내용이든 즉시 계약조건으로 편입된다.

69. 적격심사 담당자가 화물운송용역에 쓰던 표를 시설관리용역에 복사했다.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 (1) 가격점수만 있으면 수행능력 분야를 임의 삭제해도 된다.
- (2) 입찰자가 표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잘못된 표도 자동으로 맞는 표가 된다.
- (3) 해당 서비스 종류와 규모에 맞는 심사 분야·배점표가 선택되었는지이다.
- (4) 같은 총점 100점 표이면 모든 세부 분야도 같다.

70. 기본 MAS 계약의 유효기간과 개별 납품요구의 납품기한을 같은 날짜라고 기록했다. 적절한 검토는?

- (1) 기본계약의 유효범위와 해당 납품요구에 적용되는 이행기한·조건을 나누어 확인한다.
- (2) 기본계약 종료일만 알면 개별 주문의 납기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 (3) 모든 개별 납품은 기본계약 시작일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 (4) 납품요구서가 있으면 기본계약의 적용 범위는 검토하지 않는다.

71. MAS 심사를 준비하면서 회사 설립 당시의 신용평가서만 제출했다. 현재 적용 기준이 요구하는 평가 시점과 유효범위가 따로 있는 경우 적절한 처리 방향은?

- (1) 과거 등급이 좋았으면 이후 재무 악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 (2) 회사가 같은 법인이면 오래된 평가서도 언제나 유효하다.
- (3) 해당 기준 시점에 유효한 평가자료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현황 자료를 갖춘다.
- (4) 평가 시점이 맞지 않으면 문서의 날짜만 고쳐 제출한다.

72. MAS 2단계경쟁에서 선정한 업체에 납품요구를 하려는데 제안서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당 업체의 유효기간 연장 동의도 받지 않았다. 교재의 절차에 따른 검토는?

교재 201·203쪽에서 설명하는 용역 MAS 절차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 예외나 자동 연장 약정은 없습니다.

- (1) 기관이 주문일자를 과거로 적으면 유효기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2) 기간이 지난 제안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처리하지 않고, 업체 동의에 따른 연장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다.
- (3) 업체 동의 없이 기관 내부 메모만으로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 (4) 한 번 선정되면 제안서의 유효기간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73. 가상 디지털서비스 제안은 기본료 월 40만 원, 사용료 단위당 2천 원, 지원료 월 10만 원이다. 한 달 사용량은 300단위이며 세금 조건은 같고 추가비용은 없다. 월 대가는?

실제 요금표나 공통 과금기준이 아닌 독립적인 학습용 제안조건이다.

- (1) 50만 원
- (2) 100만 원
- (3) 110만 원
- (4) 60만 원

74. 건축물 신축사업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작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담당자가 “건물 사업이므로 모든 공종의 등록과 계약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나로 확인하면 된다”고 한다. 보완할 검토는?

- (1) 사업명이 신축이면 개별 공종 법률은 검토하지 않는다.
- (2) 각 공종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과 자격·발주 관련 규율을 별도로 확인한다.
- (3) 국가기관 공사는 면허 없는 업체도 어떤 공종이든 수행할 수 있다.
- (4) 전문 공종이 포함되면 건축 본체 공사도 모두 정보통신공사로 바뀐다.

75. 모델 A에서는 전문 관리자가 발주자를 지원하는 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시공계약은 별도로 둔다. 모델 B에서는 사업관리자가 시공도 맡아 시공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교재상 구별은?

- (1) 두 모델은 계약서 제목만 다르고 시공 책임의 배분도 같다.
- (2) A의 관리자가 존재하면 별도 시공자는 공사 책임이 없다.
- (3) B는 시공을 맡으므로 공기·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4) A는 관리용역 중심의 CM, B는 시공책임형 CM의 특성에 가깝다.

76. 공고 제목은 “청사 환경개선”이지만 실제 도면에는 특정 개별법상 시공자격을 요구하는 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제목만 보고 일반 건축 관련 자격만 검토했다. 참가 분석의 보완은?

- (1) 실제 도면·내역의 공종과 공고가 요구하는 자격·허용 이행구조를 대조한다.
- (2) 소규모 설비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 사업은 무조건 그 설비공사로만 분류한다.
- (3) 사업 제목에 전문 공종명이 없으면 해당 자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 (4) 사업명과 업체 상호가 비슷하면 필요한 시공자격도 갖춘 것으로 본다.

77. 가상 PQ는 경영상태의 필수 조건을 먼저 충족하고 기술평가 70점 이상도 받아야 통과하도록 정했다. A는 기술평가 95점이지만 경영상태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규칙의 결과는?

현행 PQ의 특정 신용등급·배점을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상 심사의 누적 조건을 적용합니다.

- (1) 기술평가가 90점을 넘으면 경영상태 조건은 자동 면제된다.
- (2) 높은 기술점수만으로 경영상태 필수 조건의 미충족을 상쇄할 수 없다.
- (3) 경영상태 조건이 미충족이면 해당 업체의 모든 다른 공사 실적도 소멸한다.
- (4) 95점과 미충족을 평균 내면 통과한다.

78. 가상 공동수급 심사는 구성원별 인정 실적에 해당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곱해 합산한다. A의 실적은 80억 원·참여비율 60%, B는 50억 원·40%이다. 이 규칙에 따른 합산 인정 실적은?

실적 인정식·참여비율은 지문에 명시한 가상 기준이며 모든 공동수급에 공통되는 법정 산식이 아닙니다.

- (1) 78억 원
- (2) 52억 원
- (3) 130억 원
- (4) 68억 원

79. 공사 종합심사 자료 중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등에 관한 항목을 묶으려 한다. 교재가 설명하는 분류와 가장 가까운 것은?

- (1)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만을 반복 기재하는 항목
- (2) 설계도면의 치수 오차를 계산하는 순수 물량 산출 항목
- (3) 준공 후 장비 사용자 수를 세는 수요예측 항목
- (4) 사회적 책임 관련 평가요소

80. 가상 기성 산정에서 계약금액은 10억 원이다. 이번 검사로 인정된 누적 기성률은 45%이고 지난 검사까지 인정·지급한 기성률은 30%이다. 선금·공제·변경이 없다면 이번 신규 기성대가의 범위는?

기성률·금액은 가상이며 선금정산·유보·감액·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 (1) 1억 5천만 원
- (2) 3억 원
- (3) 7억 5천만 원
- (4) 4억 5천만 원

답안 기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